

<277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일시·장소 : 2018년 11월23일(금) 신관8층 회의실 16:00~17:00

□공방위원

■노측 : 조성래 수석부위원장, 김상미 정책실장, 정범수 공정방송위원회 TV간사, 송명훈 공정방송위원회 보도간사

■사측 : 정필모 부사장, 김덕재 제작본부장, 김장환 TV프로덕션5 담당, 엄경철 취재주간

□안 건

- 심야토론 패널 선정 부적절 및 팩트체크 책임 회피
 - 10월27일 <엄경철의 심야토론> :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안건 협의 결과

노측, “혐오 조장 패널 선정, 부적절했다”

사측, “어떤 말 할지, 미리 알긴 어렵다”

1. 혐오 조장 패널 선정

노측은 차별금지법 반대측 패널로 나온 조영길 변호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는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해온 인물로 패널 선정이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찬반의 기계적 중립을 맞추고 토론의 날을 세우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목소리만 큰 인물을 섭외한 것은 아닌지 따져물었다.

또 노측은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학자나 정치인이 아닌, 당사자인 성소수자를 직접 패널로 선정했더라면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대해 사측은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된 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은 조 변호사가 노동 관련 토론에 2차례 패널로 나온 적이 있어 최소한의 검증은 된 토론자로 봤고, 이번 주제에 대해서도 차별적이고 혐오적 발언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온 곳이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널 선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노측, “가짜 뉴스 논란...인용자료 공개 등 팩트체크 해야”

사측, “생방송 현실적 한계...인용자료 공개 검토하겠다”

2. 가짜뉴스 논란, 팩트체크 책임 회피

이날 심야토론에서 조영길 변호사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인용자료들이 ‘가짜 뉴스’, ‘과장 해석’ 논란에 휘말렸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범이다”, “동성애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미국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가 잡혀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해 다른 의견만 제시해도 처벌 받는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노측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토론회가 진행 중일 때 팩트체크 하는 것이지만, 생방송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방송 이후에라도 제작진은 진위를 확인해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야토론 제작진은 방송 이후 여러 논란과 의혹 제기 등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이는 시청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게 노측의 판단이다.

또 노측은 방송 이후라도 토론자가 인용한 통계, 기사, 논문 등을 토론자에게 직접 요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주장과 사실이 뒤섞인 것도 있고, 한편에서는 과학적 검증이라고 주장해도 보는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많으며, 제작진이 팩트체크를 통해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할 경우 그 결과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측은 더 적극적인 검증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인용 자료를 공개하자는 노측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야토론 논란은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를 남겼다.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일수록 토론의 가치는 높지만 제작진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공영방송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오랜 카르텔과 금기에 맞서 정면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 공영방송에 꼭 필요한 용기이자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노와 사는 이번 공방위에서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사측은 생방송 토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